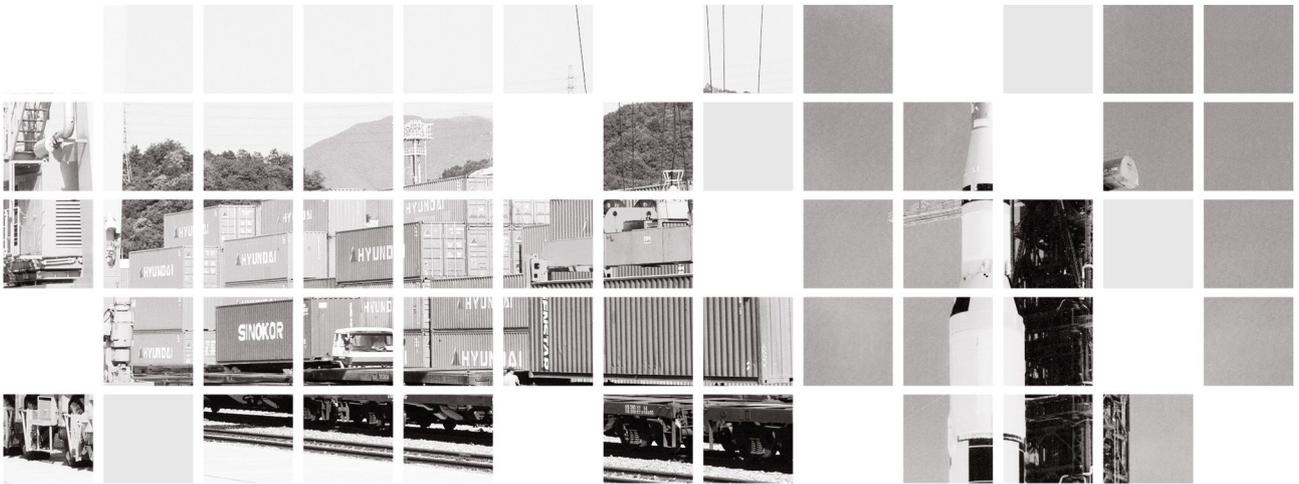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HRI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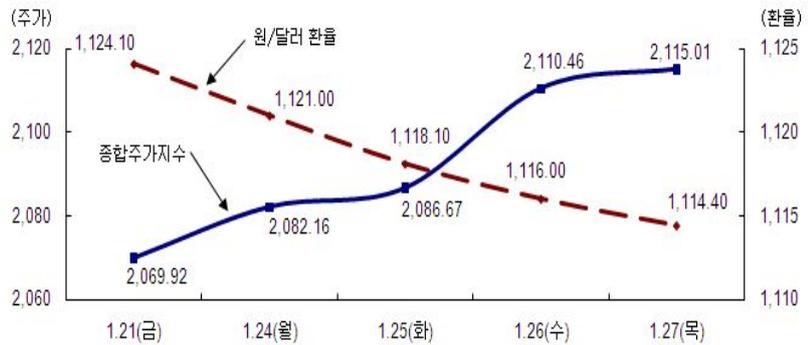


2011 해외 11대 트렌드

1. 환율 전쟁 지속
2. 국가 부채 상환 압박
3. 경기 부양책 축소
4. 新 신흥 시장 부상
5. 독일 경제 파워 증가
6. 제로섬 세계 지속
7. 인터넷 뉴스 유료화
8. 자동차 업계의 고난
9. 다국적 기업의 변신
10. 일본 기업의 M&A 열기
11. 기업 창업 붐 부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1~1.27)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1 해외 11대 트렌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임 희 정 연구 위원 외 (2072-6218, limhj9@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1 해외 11대 트렌드

■ 올해에 세계적으로 거시경제, 지역경기, 산업발전, 기업경영 분야에서 11대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거시경제

① **환율 전쟁 지속.** 2011년 세계 금융 시장에서는 환율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저평가 통화 정책으로 상당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매우 성공적인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를 본보기로 많은 나라들은 수출 부문 회복을 통한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해 자국 통화의 절하를 선택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면서 환율 전쟁과 무역 불균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② **국가 부채 상환 압박.** 미국 및 유로지역의 만기예정 국가채무 규모가 2011년 3.5조 달러로 증가하고, 2011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글로벌 기업의 부채 규모도 1.8조 달러에 달하여 정부, 은행, 기업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채무상환의 압박은 점차 커질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대기성 펀드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유동성 위기로 인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낮다.

③ **경기 부양책 축소.** 2011년에 미국 등 주요국은 경기 부양책 지속이 어려울 것이다. 선진국 경제는 재정 여력 약화로 경기 부양 규모가 축소되고 신흥국은 자산 가격 거품 등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것이다. 이로 인한 파급 영향은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고 민간 부문의 회복이 부진하여 경기후퇴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될 것이다. 반면, 신흥개도국에서는 정부 지원 축소로 인한 경기둔화가 자산시장 과열을 식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 지역경기

④ **新 신흥 시장 부상.** 2011년에는 아프리카,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의 新 신흥시장이 부상하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투자 기회 존재, 풍부한 광물 자원, 생산가능 노동력 증가, 기업환경 개선, 중산층 확대 등으로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확대가 新 신흥 시장에 집중되어 2011년에는 새로운 경제 활력이 넘치는 新 신흥 시장이 부상할 것이다.

⑤ **독일 경제 파워 증가.** 독일의 빠른 경제 회복, 재정 건전성, ECB의 새 중앙은행장을 맡게 될 가능성 등으로 2011년 유로존 경제에 대한 독일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유로화 도입 초기 유럽의 병자로 조롱받았던 독일 경제는 재정 건전성과 신흥 시장 호황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유로존 위기의 해결사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안정적 성장은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위기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PIGS 등 문제 국가들을 모두 구출해 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⑥ **제로섬 세계 지속.** 2011년에 국제 질서는 협력보다는 경쟁과 대립이 중심이 된 이른바 '제로섬' 논리가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과 EU국가들 간의 이해 관계의 대립이 심화되며, 기후 변화 및 핵 문제 등의 외교 어젠다에서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산업발전

⑦ **인터넷 뉴스 유료화.** 출판업계가 무료로 제공하던 온라인 콘텐츠에 가격을 매겨 판매하는 인터넷 뉴스의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2011년에는 더 많은 독자들이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2010년 미국의 타임 (Time)지와 영국의 <타임스(Times)>가 유료화를 강화한데 이어 <뉴욕타임스 (New York Times)>와 수십개의 다른 미국 신문들도 유료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각 출판사의 상황에 맞게 유료화 방안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뉴스의 유료화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독자들은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요금을 지불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⑧ **자동차 업계의 고난.** 2011년 세계 자동차 산업은 4년 연속 매출 부진으로 고전할 것으로 보이며 구조 개편도 가속화될 것이다. 2011년 자동차 판매 전망도 밝지 않으며 하락과 회복은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업체의 약진, 시장의 중심이동,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 구조개편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업계 경쟁구도의 재편이 예상된다.

■ 기업경영

⑨ **다국적 기업의 변신.** 금융위기에서 생존 후 재정적 우위를 다진 거대 기업들은 유연성과 민첩성까지 갖추며 급변하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거대 기업은 변화가 어렵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2011년의 다국적 거대 기업들은 유연성을 갖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코끼리도 춤을 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다. IBM이 지난 10년 간 거대 기업의 변화를 통한 생존을 증명했듯 다른 기업들도 규모의 이점을 유지하면서 빠른 변화가 가능한 조직을 구성하고 급변하는 시장의 다음 왕좌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⑩ **일본 기업의 M&A 열기.** 일본 기업들은 경제 불황을 타파하기 위해 기업 인수 합병(M&A)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기업은 20년 전 경제력을 기반으로 외국 자산을 무차별 매입하던 오류에서 벗어나, 자금력 등 충분한 여건을 갖춘 인수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경제 성장 담보, 엔화가치 상승 등 여러 국내외 요인들도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인수합병을 통해 해외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⑪ **기업 창업 붐 부활.** 투자 자금 유입이 증대되고, 창업 여건이 호전되면서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경제 부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불황속에서 생존한 벤처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다가 저렴한 사업 초기 비용, 창업 인력 증대로 벤처 창업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페이스북처럼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조건을 갖춘 신생 기업이 현재 다수 존재해 기업 공개 (IPO, 상장)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그리고 신성장 산업으로의 구조적 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다.

I. 11개 트렌드 선정

○ 올해에 세계적으로 거시경제, 지역경기, 산업발전, 기업경영 분야에서 예상되는 11대 트렌드를 선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 2011년 거시경제 부문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는 ‘환율 전쟁 지속’, ‘국가 부채 상환 압박’, ‘경기 부양책 축소’ 등이 선정됨
- 지역경기 부문에서는 ‘新 신흥 시장 부상’, ‘독일 경제 파워 증가’, ‘제로섬 세계 지속’의 3개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산업발전 부문에서는 ‘인터넷 뉴스 유료화’, ‘자동차 업계의 고난’의 2개 트렌드가 예상됨
- 기업경영 부문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변신’, ‘일본 기업의 M&A 열기’, ‘기업 창업 붐 부활’의 3개 트렌드가 전망됨

< 2011년 해외 11대 트렌드 >

분야	트렌드 내용
거시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전쟁 지속 - 국가 부채 상환 압박 - 경기 부양책 축소
지역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 신흥 시장 부상 - 독일 경제 파워 증가 - 제로섬 세계 지속
산업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뉴스 유료화 - 자동차 업계의 고난
기업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 기업의 변신 - 일본 기업의 M&A 열기 - 기업 창업 붐 부활

1) 본 트렌드는 ‘이코노미스트 2011 세계경제대전망’을 토대로 선정한 것임.

II. 해외 11대 트렌드

1. 환율 전쟁 지속

○ (개념) 2011년 세계 금융시장에서 증권시장과 국채시장은 중심에 서지 못하고 환율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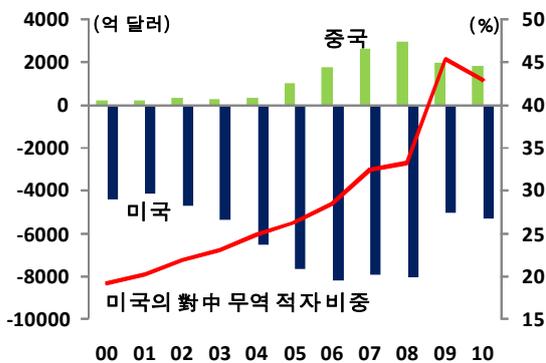
○ (내용) 각국은 자국 통화 절하를 통해 수출 경기 회복을 도모

- 자국 통화가 절상 되는 것을 원하는 나라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
 - 저평가 통화 정책으로 미국의 비난을 받던 중국이 2010년 미국 달러 대비 위안화 절상을 허용했지만 증가율 폭이 작아 큰 의미는 없었음
 - 중국의 저평가 통화 정책으로 상당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매우 성공적인 수출국으로 부상
 - 다른 나라들도 이를 본보기 삼아 자국의 수출품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통화 저평가 정책을 사용할 것임

- 환율 전쟁에 대한 소식이 대중 매체에 가득해질 것임
 - 각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고 심지어 시장에 직접 개입하면서 2011년 무역 거래가 심하게 출렁일 것임
 - 최악의 경우는 각 나라들은 인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 올렸다고 서로 비판하면서 보호 무역주의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임

○ (시사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는 수입국이 돼야하고 누군가는 통화 절상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조가 약화되어 환율 전쟁과 무역 불균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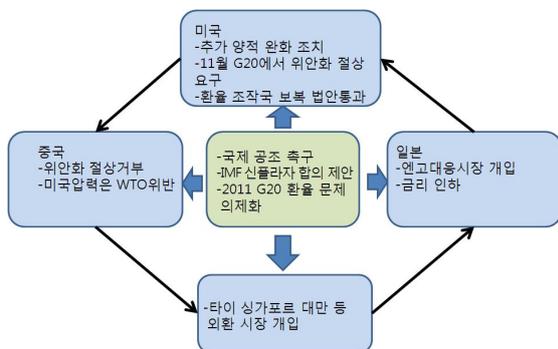
<미국과 중국의 무역 수지 추이>



자료: 무역 협회, 내외신 종합.

주: 2010년은 미국(1월-10월) 중국(1월-11월) 실적치임.

<글로벌 환율 전쟁>



경제연구본부 정민(02-2072-6220)

2. 국가 부채 상환 압박

- (의미) 2011년에도 여전히 정부, 은행, 기업 등 모든 부문에서 부채 상환의 압박이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한 충격과 두려움은 계속될 것임
- (내용)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위기는 넘겼지만, 2010년에 비해 2011년의 만기예정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남에 따라, 정부, 은행, 기업 등 모든 부문에서 부채 상환의 압박은 여전할 것임
 - 2011년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만 파산으로 치닫는 일은 없을 듯
 - 미국 및 유로지역의 만기예정 국가채무 규모가 2010년 3.1조 달러에서 2011년 3.5조 달러로 증가²⁾함에 따라, 부채상환의 압박은 여전히 높을 것임
 - 유럽의 재정위기 국가들을 위한 대규모 대기성 펀드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것인바, 유동성 위기로 인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낮은 편임
 - 기업들의 보유 현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회수 압박은 커질 수 있음
 - 2011년에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 세계 각국 기업의 부채 규모도 1.8조 달러³⁾에 달하지만, 우량기업들은 보유 현금을 늘려왔으므로 유동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
- (시사점) 2011년 채무재조정 작업을 앞둔 유럽 은행들의 슬기로운 대처가 요구되며, 2011년 후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보유현금 규모가 작고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함

< 미국기업의 연도별 만기도래 채무 >

(단위: 10억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1	79	155	212	338

자료: Moody's.

경제연구본부 김동열(02-2072-6213)

2) Bloomberg

3) Moody's의 평가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3. 경기 부양책 축소

- (개념) 2011년에 미국 등 주요국은 국가부채 누증과 재정수지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재정 여력 약화로 경기 부양책 지속이 어려운 상황
- (내용) 선진국 경제는 재정 여력 약화로 경기 부양 규모가 축소되고 신흥국은 자산 가격 거품 등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것임
 - 선진국 :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은 재정 여력 약화로 경기 부양 축소
 - 미국 : 경기 부양책이 축소되는 가운데 양적완화 정책은 돈을 빌려서 소비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실효성이 제한될 것임
 - 유럽 :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제도 경기부양책 축소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임
 - 일본 :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 여력 약화로 2011년 정부 지원책을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
 - 신흥개도국 :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되어 자산 가격 버블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정부 지원 축소,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
 - 중국 : 부동산발 버블 등 인플레이션 우려로 정책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2011년에 2010년보다 낮은 성장 전망
 - 인도 : 높은 성장,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정부 지원 축소 가능성 크나 중국 경제보다 성장률이 높을 가능성 잠재
- (시사점) 선진국은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고 민간 부문의 회복이 부진하여 경기후퇴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 반면 신흥개도국은 정부 지원 축소로 인한 경기둔화는 자산시장 과열을 식히는데 기여할 것임

< 주요국 재정수지 및 국가 부채 추이 >

(단위 :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E)	2011년(E)
미국	재정수지	-2.7	-6.7	-12.9	-11.1	-9.7
	국가부채	62.1	71.1	84.3	92.7	99.3
유로	재정수지	-0.6	-1.9	-6.3	-6.5	-5.1
	국가부채	65.9	69.5	79.0	84.1	87.0
일본	재정수지	-2.4	-4.1	-10.2	-9.6	-8.9
	국가부채	187.7	194.7	217.6	225.9	234.1
인도	재정수지	-4.0	-7.4	-9.6	-9.2	-8.5
	국가부채	72.9	72.6	79.2	71.8	71.4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0.

주 : 재정수지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재정수지를 의미.

경제연구본부 임희정(02-2072-6218)

4. 新 新 興 市 場 부 상

○ (개념) 2011년에는 아프리카,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의 新 新 興 市 場 이 부 각 될 것 으 로 전 망

- 2010년의 舊 新 興 市 場 인 BRICs의 자리를 대신하여 2011년에는 새로운 경제 활력이 넘치는 新 新 興 市 場 이 부 상 하 여 이 들 지 역 을 중 심 으 로 투 자 가 확 대 될 것 으 로 전 망

○ (내용)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투자 기회 존재, 풍부한 광물 자원, 생산가능 노동력 증가, 기업환경 개선, 중산층 확대 등으로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확대가 新 新 興 市 場 에 집 중 될 것 임

- 아프리카 : 광물 등 천연자원 보유량이 많고 생산가능 노동력의 급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 중동 : 터키의 역동적인 경제와 내수시장 확대, 사우디아라비아의 빠른 기업 환경 개선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증가시켜 이들 국가는 8~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라틴아메리카 : 멕시코는 성공적인 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중산층의 증가로 인해 고성장의 궤도로 진입

- 아시아 : 인도네시아는 혁신적인 기업들과 확대되는 중산층, 안정된 정치 등이 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베트남은 아웃소싱 메카로 부상하며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시사점) 新 新 興 市 場 이 글 로 보 열 기 업 에 게 있 어 고 수 익 을 올 리 려 수 있 는 새 로 운 투 자 기 회 를 제 공 할 수 있 지 만 여 전 히 정 치 적 · 사 회 적 불 안 정 으 로 인 한 높 은 리 스 크 가 존 재

< 新 新 興 市 場 의 GDP 증 가 율 전 망 >

(%)

대륙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23.4	3.3	5.0	5.5	5.9	6.0
	이집트	15.4	10.3	9.3	9.2	9.1	9.5
중동	터키	18.6	8.3	7.1	6.7	7.0	7.0
	사우디아라비아	15.5	9.6	9.3	8.5	7.7	8.0
아시아	인도네시아	28.9	11.8	9.4	9.6	9.5	8.9
	베트남	9.5	11.4	10.3	10.0	9.8	9.6
라틴아메리카	멕시코	14.8	3.7	7.0	6.9	6.5	6.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

주 : IMF의 GDP (미국 달러, current price 기준) 전망치를 기준으로 증가율을 산출한 수치임.

경제연구본부 김민정(02-2072-6212)

5. 독일 경제 파워 증가

- (의미) 위기 이후, 독일의 빠른 경제 회복과 재정 건전성 및 ECB의 새 중앙은행장을 맡게 될 가능성 등이 2011년 유로존 경제에 대한 독일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킬 것임
- (내용) 유로화 도입 초기 유럽의 병자로 조롱받았던 독일 경제가 재정 건전성과 신흥시장 호황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유로존 위기의 해결사로서 인식되고 있음
 - 독일의 안정적 성장과 ECB에서의 역할 확대로 유로존의 영향력이 커질 것임
 - (신흥국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안정적 경제성장) 2010년 들어 독일은 전년동기대비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실업률도 20년만에 최저 수준) 금융위기 이후, 독일 정부의 단시간 근로자 지원 등으로 실업률이 분기별 6%로 하락하며 20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 (강 유로화 정책) 한편, 독일이 ECB 중앙은행장을 맡을 경우 유로존의 안정을 이끌기 위해 강 유로화 정책이 선호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독일의 경제구조도 내수가 확충되는 균형 잡힌 경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미국 등 선진국의 더딘 경제 회복, 중국의 긴축정책, 유로존 국가의 부채 위기 지속 등으로 2011년 경제 회복 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독일의 안정적 성장은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위기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PIGS 등 문제 국가들을 구출해 줄 정도는 아닐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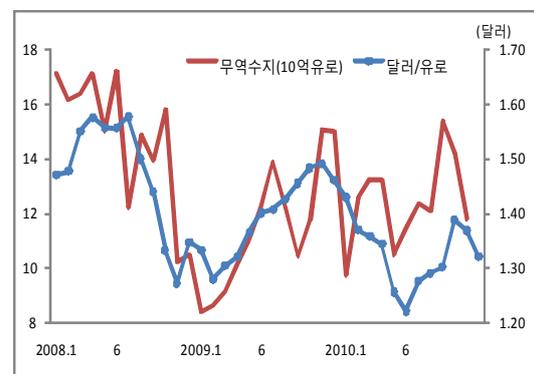
<독일 주요 경제 지표 추이>

	2009 (%)				2010 (%)		
	1/4	2/4	3/4	4/4	1/4	2/4	3/4
경제성장률	-6.3	-6.8	-4.4	-1.3	2.2	4.3	3.9
산업생산증가율	-19.0	-21.3	-14.7	-6.1	6.5	13.5	9.9
수출증가율	-20.8	-24.9	-18.5	-7.4	10.7	24.4	21.7
실업률	7.7	7.5	7.5	7.0	7.8	6.8	6.5

자료 : 독일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실업률은 ILO 기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임.

<달러/유로 및 독일 무역수지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독일은행.

주 : 달러/유로는 월평균 기준임.

경제연구본부 조호정(02-2072-6217)

6. 제로섬 세계 지속

- (개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제 질서가 '협력'에서 '경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갈등과 대립이 증대되는 현상
 - 냉전 종식 후 20년 동안의 호황과 세계 경제의 통합이 강대국들을 만족시키는 윈윈(Win-Win) 세계를 창출해 왔음
 - 그러나 중국의 부상, 유럽 국가들간의 갈등으로 세계 정치시스템은 경쟁과 적대 관계로 변화되고, 이는 윈윈 세계를 제로섬(Zero-Sum) 세계로 변화
- (내용) 2011년에 제로섬 논리가 미중 관계 악화, 유럽 연합 내부의 논쟁, 기후변화와 핵 확산 등에서의 국제 협력 실패 등을 초래할 전망
 -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슈퍼파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고, 정치·군사·경제 분야에서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
 - 태평양에서의 미·중의 군비 확장, 핵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마찰 증대, 통상 및 환율과 관련된 양국간의 대립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특히, 환율과 관련하여 중국은 작은 의례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오바마 정부는 보호주의적 성격을 띤 법안을 통과시킬 것임
 - 기후 변화에 대한 새로운 국제 협약의 진전을 반대해 온 미국 등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온 중국의 대립이 지속될 전망
 - 유럽연합 내 국가들 상이에서도 국제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며 국제 외교 어젠다 (기후변화, 핵확산)에도 진전을 못이루는 철저한 실패가 될 것임
 -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경제 이슈 전반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긴축 경제, 재정 적자, 유럽 중앙은행 관리 등의 이슈를 두고 EU국가들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전망
- (시사점) 국가간 갈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외교·경제 정책 수립이 시급하며,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

경제연구본부 최성근(02-2072-6223)

7. 인터넷 뉴스 유료화

○ (개념) 최근 출판업계는 무료로 제공하던 콘텐츠에 가격을 매겨 판매하는 인터넷 뉴스의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음

- 많은 출판사들이 웹기반 광고 매출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독자들에게 요금을 매겨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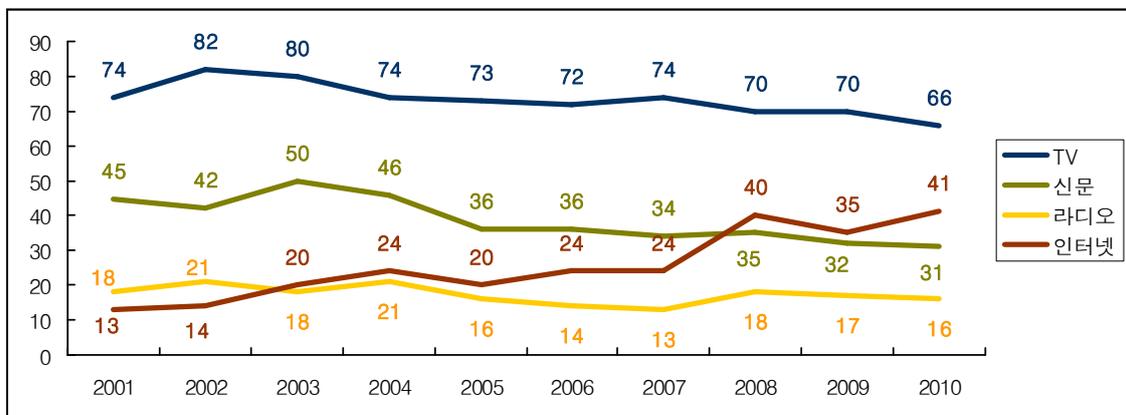
○ (내용) 2011년에는 더 많은 독자들이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들어 콘텐츠를 보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웹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음
 · 2010년 미국의 <타임(Time)>지와 영국의 <타임스(Times)>는 아이패드 서비스를 개시함과 동시에 유료화를 강화하였음
 ·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지는 1월이나 2월 중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이며 4월까지 수십개의 다른 미국 신문들도 유료화를 시도할 전망

- 더불어 출판사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다양한 유료화 방안을 고안해내고 있음
 · <타임스(Times)>처럼 철저하게 유료화하여 돈을 내고 구독한 사람들만이 기사를 읽을 수 있고 인터넷 검색엔진에도 뜨지 않는 형태가 있음
 · 한편 한정된 개수의 기사를 무료로 전환하고 이를 초과하면 유료로 전환되는 '종량제' 유료화 모델도 다수 존재함

○ (시사점) 독자들은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요금을 지불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며 출판업계는 각자 상황에 맞는 유료화 방안을 고심해야함

< 미국의 뉴스 공급원 조사 대상 중 백분율 >



자료: Pew Research Center, 2011.1.4

산업전략본부 전해영(02-2072-6241)

8. 자동차 업계의 고난

○ (개념) 2011년 세계 자동차 산업은 4년 연속 매출 부진으로 고전할 것으로 보이며 구조 개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자동차판매량은 2007년 7140만대로 정점을 찍은 후 2008년과 2009년 큰 폭 쇠퇴했으며 2010년 회복세를 보였으나 정점에서 5%정도 모자란 수준임
- 2011년 자동차 판매 전망도 밝지 않으며 신흥업체의 약진, 시장의 중심이동,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 구조개편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내용) 자동차 판매량의 하락과 회복은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업계 판도의 재편도 전망됨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자동차 수요는 거의 증가하지 않거나 증가하더라도 소폭에 그치고 중국, 인도의 판매 증가 속도도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자동차 판매는 상승할 전망이지만 다른 지역의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임
- GM이 구조조정과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부활하면서 GM, 도요타, 폭스바겐의 3강 체제에 현대차와 포드가 위협하는 경쟁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자동차 기업 판매 순위 >

(단위: 만대)

	2007		2008		2009		2010 (10월 통계)	
1	도요타	953	도요타	914	도요타	745	GM	730
2	GM	937	GM	835	GM	736	도요타	701
3	포드	639	폭스바겐	623	폭스바겐	654	폭스바겐	635
4	폭스바겐	616	르노닛산	585	르노닛산	521	르노닛산	514
5	르노닛산	589	포드	529	포드	485	현대차	469

자료 : 글로벌 인사이트

○ (시사점) 시장변화와 업계판도 재편에 대응해서 글로벌생산체제를 최적화하고 원가구조개선, 유연성증대 등 기업체질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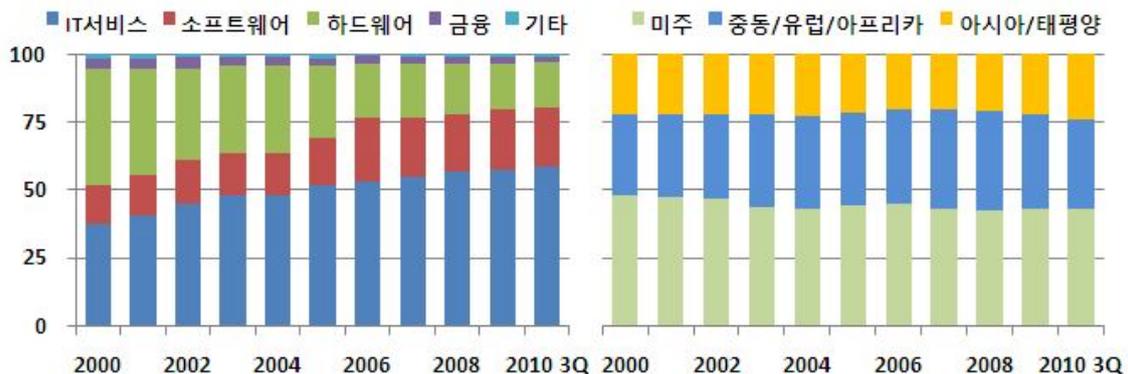
- 시장의 중심이동에 대비하여 사업전략을 재수립하고 전략차종의 조기 출시를 통한 시장 선점이 필요

산업전략본부 김종호(02-2072-6240)

9 다국적 기업의 변신

- (의미) 금융위기에서 생존 후 재정적 우위를 다진 거대 기업들은 유연성과 민첩성까지 갖추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우위를 잡하기 위해 노력
 - 거대 기업의 창조적 파괴 : 다국적 거대 기업들은 스스로가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민첩성을 보여주며 코끼리도 춤을 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임
 - 민첩성이 중요해진 이유는 기술의 진화, 신흥 시장의 구매력 증대 등 시장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들에게 사업의 빠른 이동을 요구하기 때문
 - 거대 기업은 빠른 변화가 어렵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2011년의 다국적 거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유연성을 갖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것임
- (내용) 2011년에는 P&G 및 월마트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스스로 변화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IBM의 모습을 보임
 - IBM의 100년 생존 비결: 거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을 갖추고 스스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능력을 통해 불황과 위기를 극복해왔음
 - 설립한지 100년이 되는 다국적 기업 IBM은 2000년대 들어 사업 구조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미주 지역의 비중을 줄이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이 같은 변화는 세계 각국에 기업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를 갖춘⁴⁾ '세계적으로 통합된 기업'과 같은 거대하지만 민첩한 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 (시사점) 급변하는 시장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규모의 이점을 잃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한 문화와 조직 구성이 중요

< 2000년대 IBM의 사업 영역 및 지역별 매출 비중 변화 >



자료 : IBM 각 연도 재무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산업전략본부 김필수(02-2072-6238)

4) IBM의 구매부서는 중국, 재무부서는 브라질에 있으며, 세계 각국의 지식센터가 기업 전체를 책임지고 있음.

10. 일본 기업의 M&A 열기

- (개념) 2011년 일본 기업들이 경제 불황 타파를 위해 인수합병(M&A)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됨
- (내용) 20년 전 경제력을 기반으로 외국 자산을 무차별 매입하던 오류에서 벗어나, 합리적이면서도 충분한 여건을 갖춘 인수합병이 가능하게 됨
 - (인수합병 여건) 202조엔(2.4조 달러)에 달하는 충분한 자금 보유와 상장기업 중 다수가 부채없는 기업으로 인수합병을 위한 여건이 마련됨
 - 2010년 아시아 지역에서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 인수합병을 하였으며, 2011년 많은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위해 준비 중임
 - 예를 들어 후지쓰는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분야의 투자를 위해 10억 달러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사히맥주는 인수합병을 위해 9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함
 - (인수합병 붐 요인) 국내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인수합병 전쟁에 뛰어들게 유도하고 있음
 - 인구 감소, 국내 경제 성장의 담보, 디플레이션 우려, 엔화 가치의 지속적 상승 등 많은 국내 경제 요인이 인수합병을 통해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함
 - 인수합병은 새로운 시장과 인재 확보에 유리하므로, 자본을 통해 신흥시장에 진입하려는 일본 기업의 전통적 방식과 잘 맞아떨어짐
 -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성장을 달성하려는 일본 기업의 욕구로 인터넷 시장에서 인수합병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 경영자들의 과도한 성취욕도 인수합병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작용함
 - (인수합병 문제점) 신중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일본 기업 문화 분위기로 인해 인수합병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기업 인수합병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음
- (시사점) 일본기업은 2010년 인수합병의 추진 기반을 충분히 마련했고, 2011년에는 실제 인수합병을 많이 이루어낼 것으로 예상됨

산업전략본부 장후석(02-2072-6234)

11. 기업 창업 붐 부활

○ (개념) **신생 기업 증가, 벤처 자금 유입 증대 등으로 벤처업체가 활성화되면서 경제 부활 속도가 빨라짐**

- 그동안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기업이 많았던 것에 비해 금년은 창업과 투자 여건이 호전되면서 새롭게 설립한 신생기업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경우, 창업 5년 이하인 신생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벤처 활성화는 경제 부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Ewing Marion Kauffman 재단의 "창업 후: 신생 기업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얼마나 지속되는가?"라는 연구에서 2000년 창업한 기업이 5년이 지난 후에 설립시 창출한 일자리의 3/4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내용)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호전되면서 벤처 창업이 많아지고 기업을 공개(상장)하는 벤처 업체가 늘어남**

- 생존한 벤처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다가 저렴한 사업 초기 비용, 창업 인력 증대로 벤처 창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 저렴한 컴퓨터 장비와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의 폭넓은 보급으로 인터넷 웹 기반 사업의 창업 비용이 과거보다 덜 소요
 - 대기업에서 R&D 지출을 줄이면서 창업을 희망하는 인력이 크게 증가
 - 생존자 효과로서 경기 불황 이후 살아남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자금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페이스북처럼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조건을 갖춘 신생 기업이 현재 다수 존재해 기업 공개(IPO, 상장)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더욱이 큰 금액을 일부 소수 기업에 투자하는 전통적인 투자 모델보다 소규모 금액으로 다수 기업에 투자하는 '슈퍼 엔젤(Super Angel)'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기업공개를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시사점) **창업 활성화로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발굴이 촉진되어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임**

산업전략본부 이장균(02-2072-623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2.6	-4.9	-0.7	1.6	5.0	2.8	3.7	1.7	2.6	-	3.0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	1.5
일본	-6.3	-19.9	11.3	-1.2	5.7	4.3	6.8	3.0	4.5	-	1.6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1	8.1	7.2	4.4	4.8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월21일	1월27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3.40	3.39	-0.01%p
	엔/달러	92.93	88.43	81.19	82.97	82.25	-0.72¥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470	1.3702	0.0232\$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872	11,990	118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10,275	10,479	20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81	3.86	0.05%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24.1	1,114.4	-9.7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2,069.9	2,115.0	45.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월21일	1월27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88.53	85.62	-2.91\$
	Dubai	78.06	73.14	88.80	92.53	93.33	-0.80\$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33.99	331.39	-2.60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